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14호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1)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2) 대전광역시장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함.

나.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1) 대전광역시장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5년 마다 노동인권 증진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전략, 자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른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사항이 포함된 경우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다.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 (1)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사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노동환경 및 제도개선 연구,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강사 지원, 노동인권 관련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함.
- (2) 대전광역시장이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전광역시장이 노동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 등에 대한 포상 및 예우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1)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노동인권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2)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을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 등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

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gsung6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인권”이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에 따른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노동인권 증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노동인권 증진사업) ① 시장은 노동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환경 및 제도개선 분석·연구

4.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강사 지원

5. 노동인권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노동인권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및 예우) ① 시장은 노동인권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을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 등으로 예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